“월급 받아도 빚 갚기 버겁다”… 개인회생 역대 최대 전망

9월까지 12만건 넘어 10.6% 증가
지난해 연간 신청의 83.6% 달해
신청자 75.5% 급여소득자로 집계
절반 이상 월 250만원 이하 소득



고금리가 지속되는 데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개인회생 신청이 늘고 있다. /Chat GPT 이미지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로 서민들의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12만건을 넘어서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증가했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자 상당수가 급여소득자인 데다 절반 이상은 월소득 25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생활비 부담과 소득 정체가 채무 취약계층의 상환 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12만47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만2689건)보다 10.6%(1만2014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개인회생 접수 건수인 14만9147건의 83.6%에 달하는 규모다. 남은 3개월 동안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대치를 다시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파산 신청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9월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3만2844건으로 전년 동기(3만832건) 대비 6.5%(2012건) 늘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이 동시에 증가하는 배경에는 고물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 확대와 소득 정체, 채무 상환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에 의존했던 취약차주들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법적 채무조정 절차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자의 75.5%는 급여소득자로 집계됐다. 신청자의 55.8%는 월소득이 25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 신청자의 월소득 중위값은 약 240만원으로 2024년(약 230만원)보다 4.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인 7.34%를 밑도는 수준이다. 소득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더딘 가운데 생계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채무 상환 여력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인파산 신청자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생활비와 소득 문제에 집중됐다. 개인파산의 주요 경제적 파탄 원인으로는 생활비 지출 증가가 4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가 45.7%로 뒤를 이었다.

개인회생을 준비 중인 30대 A씨는 건강 문제로 직장을 자주 옮기면서 소득이 불안정해졌고, 생활비와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 대출을 반복적으로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급여가 낮고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월세와 생계비는 계속 늘어났다”며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추가 대출과 카드 현금서비스까지 이용했지만 이제는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나오지 않아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상담 대표번호를 ‘1375’로 지정하고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채무자가 복잡한 지원제도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도 상담과 채무조정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신복위 관계자는 “1375로 전화하면 채무상담과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은 물론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과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및 신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전파 탐지부터 통신 차단까지”…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실효성 논란

KCA, 전파 탐지기 개발 일정 단축
재밍 기술은 법적 제약에 적용 난항
와이파이 차단도 우회 접속에 한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통신망 차단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공공 와이파이 차단과 전파 탐지기 개발 등 다양한 대책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시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지난 5월부터 추진해온 전파 탐지기 개발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현재 현장 실증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작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파 탐지기는 시험장 안에서 송출되는 무선 신호를 잡아내 부정행위에 쓰인 기기를 찾아내는 장비다. 최근 국가자격시험에서 AI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자 대응책으로 거론됐다. 다만 오는 19일 수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통신 자체를 끊는 ‘재밍’ 기술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재밍은 특정 주파수 대역에 방해 전파를 송출해 통신을 교란하는 방식이다. 이를 활용하면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는 물론 LTE·5G 등 셀룰러 통신까지 차단할 수 있다. 외부 기기와 연결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로를 제한하는 셈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재밍 기술을 부정행위 방지에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대학입학시험인 ‘가오카오’ 기간 전국 시험장에서 무선 신호 차단기를 가동하고 드론으로 불법 전파를 탐지한다. 인도 국가시험청도 올해 의대 입학시험에서 5G 재밍 장비를 운영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재밍 기술을 민간 시험장에 적용하기 어렵다. 전파법 29조에 따라 타인의 전파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군·방산 등 보안이 중요한 분야에서 활용 중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술을 올해 수능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동통신망을 차단하는 방안 또한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 시험장 주변 기지국의 통신을 제한하면 수험생뿐 아니라 인근 주민과 상인, 응급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기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시험장 주변 생활 인프라와 통신 서비스 전반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업계에 시험장 반경 50m 이내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구역의 와이파이 신호를 제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LTE·5G 등 이동통신망을 통한 우회 접속까지 막기는 어려워 차단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지국을 통한 통신이 가능한 상황에서 와이파이 차단만으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시험장 주변 일반 이용자의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

